비수도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남부발전, 3420만달러 수출 성과

베트남서 186건 상담·50건 MOU
스타트업 키나바, 국제대회 1위 수상
부산외대 협력, 청년 글로벌 경험 제공
해외 판로개척, 유니콘 성장 발판 마련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중기청, 부산창경센터와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을 통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InnoEX' 전시에 참가한 기업대표들이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류승호 영사(첫 줄 왼쪽 세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342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청년인재들에게 글로벌 실무경험과 취·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베트남 현지 진출 프로그램에서는 ▲B2B 투자 밋업 ▲현지 창업 생태계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InnoEX) 공동관 지원 ▲찾아가는 바이어 미팅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활동이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86건의 상담을 진행, 50건(약 342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성과도 잇따랐다. 프로젝트 지원기업인 키나바는 세계 28개국 2144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베트남 최대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수열탄화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표해 국제 트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키나바는 상금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와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스타트업 교류도 본격화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SIHUB(Saigon Innovation Hub)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베트남 응우옌 탓 단 대학교와도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창업 생태계와 시장 분위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발표와 국제행사 참여 등 모든 일정에서 실질적 성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은 인재와 기술"이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 등 보호
주 4.5일제 시범사업, 육아지원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공정위, 과징금·과태료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고용부, 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 안전보건 강사 교육 건설업 확대

안전보건공단, 맞춤형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9월 1일부터 건설업까지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맞춤형 강의자료와 교수법 교육이 함께 제공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 물체 충돌,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건설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